

#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 [평화운동 협력세션 II-3 : 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 평화운동]

정윤수 평화공공외교협력단

5월 21일 개최된 2021 DMZ 포럼(2021 DMZ Forum)의 이튿날, 그 시작을 알린 첫 세션은 '평화운동 협력세션 II-3'으로 총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그중에서도 '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 평화운동'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군사기지와 군사활동으로 야기된 문제점,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권한 행사,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과 지자체에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좌장은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컨설턴트 고유경이 맡았으며 발제는 녹색연합 팀장 신수연, 퀸즈벨파스트대학교 정치학 박사 과정의 황준서, 법무법인 율립의 변호사 송봉준이 맡았고 토론에는 평택시의회 의원 권현미,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명숙,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최희신이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 고유경은 작년 DMZ 포럼의 논의를 한층 발전시켜 한반도 종전 캠페인, 기지 평화 네트워크, 군사기지와 지자체 간의 토론, 미군 기지와 주민의 삶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주제를 언급하며 세션을 시작을 알렸다. 지난 25년간 지방 자치가 주민 참여로 인해 발전해 왔으나 미군은 지방 자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지자체에의 주민의 요구가 빚발치고 있다. 그러므로 군사 기지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주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주민이 말하는 지자체의 책임 있는 관여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세션에서는 문제 해결에서의 지자체 역할과 주민참여운동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녹색연합 팀장 신수연은 2014년부터 군사 기지 환경 감시와 주민들과 연대 활동은 해온 바 있으며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문제 피해의 구체적 사례를 모으고 각각의 문제점을 잘 취합하여 문제의 성격에 맞게 대응 기구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중앙 정부는 미군기지와 관련한 역할에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며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분명 한계가 있기는 하나, 기지의 감시와 피해 지원에 있어 지역사회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미군기지는 전국 곳곳에 93개, 도합 약 243km<sup>2</sup>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지 내부의 조사 권한이 없어 기지를 반환하거나 기지 밖으로 오염이 유출되기 전에는 내부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미군 기지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지하수가 오염되고 벤젠과 페놀을 비롯한 발암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며 기지 내의 송유관과 같은 시설이 낙후되어 기름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찾아 주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가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미군 기지에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반환된 기지의 정화와 복원은 해당 지자체의 몫이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환경 정의와 토지 정의에 따를 때도 중요한 문제인데 신수연 팀장은 중앙 정부는 각 지역에서 어떤 쟁점으로 갈등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의 모니터링, 민관 공동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2015년부터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인력이 배치되기는 하였으나 소파 조항과 같은 상위 법항을 넘는 구속력은 없

으므로 소파의 환경 조항에는 구속성이 없는 것, 미군 관련 코로나 방역과 여러 범죄 또한 지적했다. 따라서 신수연은 “중양의 미군 관련 기구와 민원 전담 조직을 개설하여 제도를 개선하면 이는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마중물이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퀸즈벨파스트대학교 정치학 박사 과정의 황준서는 미군과 관련하여 비슷한 처지의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의 지자체로부터 얻은 교훈을 참고할 것을 주장했다. 주한미군과 유사한 성격으로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유럽의 나토 역시 환경 문제를 다수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통일된 후의 독일은 1993년 나토와 보충 협약을 개정하여 주독미군의 환경 책임을 일정 부분 강화했다. 협약의 강화를 통해 환경 피해의 보상을 요구하고 알 권리와 정보 제공에서도 일부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면책 특권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서 제도적 권한 일정 부분 확보하고 이후는 지자체에게 대응을 넘기는 데 그쳤다. 독일의 사례에서 문제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다. 유류 오염과 공군 기지의 활주로에서 소방 훈련이나 기체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사용하는 PFAS 등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특히 PFAS는 소각 처리해도 제대로 사라지지 않아 ‘forever chemical’이라고 불리며 생물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된다. 주독미군이 이러한 화학물질을 땅으로 흘러가게 두자 독일 지자체는 반발을 시작했다. 어느 정도까지 오염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 선제 대응이 어려운 소리 없는 오염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지자체는 화학 물질로 인한 오염 의혹을 제시하며 자체 조사 후 그 결과를 매개로 미군에게 오염의 원인 입증을 요구했다. 또 다른 문제인 소음은 신체적으로 경험되므로 주민의 불안이 더욱 크며 선제적, 적극적 대응이 가능한 문제이며 공군 기지와 사격장, 훈련장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의 지자체 중에는 소도시임에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미군에게 비행 금지 시간과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성과를 일구었다. 독일의 사례는 중앙 정부와 미군의 보충 협약이 1차적으로 독일 환경법 적용의 제도적 권한을 가능케 했지만 실질적인 환경 피해를 보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그 제도적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황준서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과 협의할 때 지자체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지자체의 권한을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고 자체 조사를 통해 계속해서 환경 오염을 확인하고 역으로 주한미군에게 환경 오염이 주한미군이 유발한 환경 오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역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 일본 등 미군에 의해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관련 조사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실질적인 감독 권한과 대책을 마련할 방안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주한미군에게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율림의 변호사로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송봉준 변호사는 “환경 오염의 피해는 주민이 겪고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고 주민권익보호에 해당하므로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환경기초조사, 환경 오염 예방과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 법상의 문제로 미군은 환경 기초 조사의 5년 기간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기적인 의무도 없고 오염의 확산 방지 조치, 원인 규명 등 미군 기지 내부에는 기준이 없어 정확한 대책 수립이 어려운 것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소파의 환경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환경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의 영토에서 미군 기지 환경 문제에 미군의 환경 책임이 면제되는 것에 있어 한국의 환경 주권 행사는 너무도 당연하다. 고등법원의 판

결에 따라 새로운 미군기지에서는 국내법을 사용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대한민국의 환경 법령을 따르게 하는 것 역시 한국의 환경 주권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송봉준은 2001년 15개 미군 기지 주둔지역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서 입법을 추진했던 의미 있는 법령의 사용을 제안했다. 이때 만들어진 법령은 현행법에도 영향을 끼쳤다.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미군에게 주민의 피해보상과 환경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기지 내부 조사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그 외 조례 제정과 입법 추진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6년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역 구역 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시작으로 평택시, 부산 남구, 대구 남구, 서울특별시 등 많은 지역에서 잇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비록 법률과 같은 수준의 강제력은 없지만 비구속적 합의, 교섭 등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처럼 일반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미군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01년 지자체장 협의회는 법률안을 바탕으로 미군공여지역의 환경 오염에 관한 연대와 활동이 더욱 절실하다. 송봉준은 “미군기지의 문제가 주민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지자체가 자치 사무로써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미군과 관련한 한국의 실상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주민평화운동이라는 세션에 걸맞게 경기 지역 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가장 큰 미 육군기지가 위치한 평택시의 의원인 권현미는 평택 평화 센터에서 미군기지의 문제점 현황과 경과, 범죄 등 주요 갈등 사항을 정리한 바 있으며 “평택시의 2가지 사건이 법과 제도 개선에 관심을 두게 했다”고 말했다. 먼저 하수처리장 사건에서 평택시는 미군기지 내 하수 처리 관련 정보를 공유받거나 알지 못 하였는데,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금은 모두 평택시가 지게 되었다. 또한 침수 사건에서는 예견된 재난이었으나 미군이 대응이 없어 한 마을이 침수되었고, 주민들이 2번의 소송을 한 뒤에야 20%의 피해만을 인정받아 피해 보상 금액보다 더 큰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되었다. 이 두 사건을 볼 때 앞으로의 갈등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고, 중앙에서 할 수 없는 것에 지방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군과 상생할 방안, 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게 행정 제도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미군 관련 사안은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이 때문에 피해 시민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과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명숙은 군 관련 시설에의 주민을 대변하여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포천시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사격장과 훈련장이 있어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 전차 기동 시 교통 혼잡, 오발탄과 도비탄이 마을로 떨어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훈련에 잠 못 이루는 밤도 허다하다. 이에 주민들은 2014년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15년부터 대정부집회를 실시하며 안전대책을 촉구하였으나 변화는 없었다. 타 지역은 특별법이 있어 지원 사업이 있는데 포천시는 여전히 산불, 도로 파손, 농작물 피해, 민가 지붕에 탄환이 낙하하는 사고 등을 감수하고 있다. 야간 사격은 국방부 차관의 간담회 후 일시적으로만 중단되었고 소음법의 실효성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며 군사보호구역 내 보상에 있어 군사보호시설 구역 평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최희신은 동두천에서 2017년부터 활동하였고 현재 캠프 모빌의 반환과 온전한 환경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두천은 약 42%가 미군기지로 1991

년에 미군 관련한 평화운동 시민단체가 설립되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군의 범죄와 관련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2012년에 해당 단체가 해체되고 2017년 들어서야 기지 반환 운동을 내세운 단체가 설립되었다. 동두천 미군기지인 캠프 모빌의 일부는 작년 12월에야 반환되었는데 60,000평 중 15,000평만이 반환되었다. 반환되지 않은 45,000평에는 무인항공기의 활주로와 비행장이 있어서 약속했던 60,000평의 전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그 무인항공기가 동두천 전역을 날아다니며 소음을 내고 민간인 주거지역을 촬영한다는 데 있다. 최희신은 “캠프 모빌의 온전한 반환을 요구하고 드론 비행장이 마치 전시 상황과 같은 위협감을 하루종일 지속하고 심각한 소음공해와 무엇을 찍는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며 동두천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국가적 대책 요구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실시간으로 받은 질문과 의견에 대한 답변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독일 내의 협의체가 어떤 노력으로 설립되었고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졌는지, 독일에도 지자체 관련 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황준서는 독일에도 지자체의 권한을 명시한 미군기지 관련 상위법은 없으며 독일 행정법에서 지자체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끔 개정하여 가능성을 열었으며 끈질긴 요구와 자체적인 조사와 항의가 계속되면서 한 도시의 지자체 내 전담 부처가 생기고 이에 따라 다른 도시에서도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협의체가 생겼다고 답했다. 도시마다 권한이 다르긴 하지만 공통으로 정보 접근 권한을 가졌고 지역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미군이 활동하고 주민의 안전 보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안을 내세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질문은 부산시 생화학 실험실의 주민투표와 관련한 행정 소송의 전망을 물었고 이에 송봉준은 법률상으로는 자치 사무와 국가 의무 사무가 구분되지만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국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중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거뒤틀 만하다고 답했다. 마지막 질문은 포천시 시민단체가 법률적인 구제에 도전했는지를 물었고 이에 최명숙은 현재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금으로 활동하고 있어 경비 문제로 소송은 생각해보지도 못 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신수연은 제도적으로 다각적인 노력, 최희신은 피해 사례의 점검 등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연계 그리고 전담 부서 설치, 권현미는 제도적인 기반을 다시금 강조했다. 좌장 고유경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여럿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권과 평화”를 강조하며 세션을 마무리 지었다.

# 2021 DMZ 포럼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

2021.5.21(금) ~ 22(토) | www.dmzforum.or.kr

## [평화운동 협력세션 II-3 : 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 평화운동]

장은진 평화공공외교협력단

2021 DMZ 포럼 두 번째 날(22일)의 '평화운동 협력세션 II-3'에서는 '군사기지와 지자체, 주민 평화운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세션에서는 고유경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컨설턴트가 좌장을 맡고 신수연 녹색연합 팀장, 퀸즈벨파스트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황준서, 송봉준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차례로 발제를 하고 권현미 평택시의회 의원, 최명숙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청중 토론은 온라인을 통해 채팅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연합 팀장을 맡고 있으며 군사기지 환경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신수연 팀장은 미군 주둔 기지에서 환경오염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범죤나 소음 피해, 사격 오발 사고 등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 사례를 언급했다. 신수연 팀장은 이런 상황에도 미군 기지는 담벼락 안에 쌓여 있어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기지 내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오염이 유출되고 나서야 사고의 정황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런 상황에서도 경기도 의회나 평택시의회 등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는 지역에서 미군기지 환경 피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자체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모으고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취합하는 것, 각 지자체의 피해 성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퀸즈벨파스트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황준서는 독일의 미군 기지와 지자체 간의 갈등과 협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황준서는 "독일은 유럽 국가 중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해있는 국가"라며 "독일은 통일 후 나토군 지위에 대한 보충 협약을 미국과 개정하면서 주둔 미군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일정 부분 성공했는데, 이를 통해 독일이 주둔 미군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독일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을 설정하고, 주거 지역 회피해서 비행하는 것을 협의한 것, 지자체에서 미군이 환경을 오염한 부분을 확인한 후 역으로 주한 미군이 유발한 것이 아님을 미국으로 하여금 입증하라고 요구한 것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이런 독일의 사례에서 중앙정부와 미군의 독일 환경법을 주둔 미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한국과 일본 등 주둔 미군이 있는 지역이 서로 협력을 통해 관련 조사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언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송봉준 변호사는 주둔 미군 기지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미군기지에 대한 실질 조사가 어려운 점을 언급하면서 이것의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국내법 제정이나 수정 요구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미군 기지에 대한 문제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

며 관련 입법 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권현미 의원과 최명숙 위원장, 최희신 사무국장 세 명이 패널로 참가했다. 권현미 평택시 의원은 평택시가 미군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게 한 두 가지 사건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팽성 하수 처리장 사건이다. 미군 기지 내부의 하수 관로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평택시는 미군으로부터 하수 관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 이는 소송을 하자 미군이 배출한 오염 물질에 대한 벌금을 평택시가 물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두 번째는 장등리 침수 사건이다. 이는 예견된 침수에 대해 평택 시민이 미군에게 해결을 요구했지만 미군이 이를 등한시해 한 마을이 침수된 사건이다. 권현미 의원은 미군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자료 취합에 부적절하다며 행정과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명숙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포천시 주민들은 미군 전차 기동으로 인해 머리가 흔들릴 정도의 고통과 오발탄과 도비탄이 마을에 떨어져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주둔 미군 기지로 인해 포천시 주민들이 받는 실질적 피해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주민들이 사격장 앞에서 시위도 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을 발표하며 정치인들이 포천시를 몇 차례 방문하고 변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군사 보호 시설에 대한 법 제정과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은 동두천 지역에 오랫동안 미군 기지가 있으면서 생긴 문제를 발표했다. 동두천 주민들은 캠프 모빌 주변을 걷는 걷기 활동을 통해 캠프 모빌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약속했던 평수가 아닌 일부인 만 오천 평만 반환되었다. 이는 캠프 모빌에 미군 드론의 활주로를 둔다는 이유였다. 최희신 사무국장은 이 드론으로 인해 소음 문제나 무엇을 찍는지 알 수 없어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에 대해 해결을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온라인 줌 토론 참가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패널들이 그에 대답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세션은 마무리되었다. 첫 번째 질문은 ‘독일과 미국이 협의체를 만든 것은 어떤 노력으로 이루었고, 어떤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지자체의 권한을 명시하는 법이 있는가?’였다. 이에 대해 황준서는 ‘지자체의 권한을 명시한 상위법은 미군 기지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나토군 보충 협약을 통해 독일의 환경법을 주둔 미군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독일 환경법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통해 지자체가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자체 자체적인 조사와 협의 요구를 주둔 미군에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우고 공동으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한다. 협의체의 권한은 정보 접근 권한이다. 야간 비행 계획 등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산 미군 생화학 실험실 폐쇄와 관련해서 이를 요청하는 주민 투표가 안된 이유가 미군 생화학 실험실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처분이 나온 것이다. 현재 이를 두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이

다. 이에 대해 송봉준 변호사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안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논거를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다뤄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은 '기지 주변에 포천 주민들이 소음 소송이나 법률적 구제를 검토해보셨는가'이다. 이에 대해 최명숙 위원장은 1인 시위도 시민들이 경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소송까지는 고려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